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5월 9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FactBrief 16>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될 법안 시리즈 ①

19대 국회에서 버려질 안보 관련 법안들

이옥남·김도연(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약 1만 건의 법률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1만여 건의 법이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임기만료폐기'로 자동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 제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될 법안들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상임위 별로 계류되어 있는 안보관련 법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정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보관련 법안

정보위원회는 안보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주무 위원회다.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북한의 무력도발 및 핵실험, 최근 IS(이슬람국가) 민간인 테러 문제로 인해 안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었고 관련법도 다수 발의 되었다. 그러나 야당은 '정보기관 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를 내세워 인해 꾸준히 반대했고 결론적으로 19대에 통과된 안보관련 법안의 극소수다.

정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표적인 안보관련 법안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얼마 전 오프라인 상의 대테러방지법은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갈수록 고도화되고 치밀화되어 가는 온라인상의 테러방지책은 시급한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장에 협조를 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표 1】 참조).

【표 1】 제19대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보관련 주요법안

연번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주요내용	비고
1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하태경	'13.03.26	① 국무총리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신설, 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②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사이버위기경보 발령·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통보 및 조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을 제정	
2	국가대테러활동과	송영근	'13.03.27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	

연번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주요내용	비고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테러 대응 공조 및 협조체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3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서상기	‘13.04.09	① 국가정보원장을 책임자로 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송영근	‘14.08.28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분을 보호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송영근	‘14.09.30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국익정보 추가	
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병석	‘15.02.16	①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상황 규정 ② 국제사회와 테러대응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7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노근	‘15.03.12	①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상황 규정 ② 국제사회와 테러대응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8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	‘15.05.19	사이버위협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9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노근	‘15.06.24	사이버테러의 사전 탐지 및 위기의 조기 차단을 위한 대응 체계 마련	
10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서상기	‘16.02.22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보관련 법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표적인 안보 관련 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대테러 관련법 중 핵심 법안으로 테러 및 중대 범죄 혐의자에 대해 감청을 가능하게 하여 사건을 방지하고 사후에는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야당의 결사적인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의 거의 희박하다. 심지어 서상기 의원안의 경우, 감청대상을 외국인에게 한정시켜 내국인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직면했다.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여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표 2】 참조).

【표 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보관련 주요법안

연번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주요내용	비고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서상기	‘14.01.03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제도를 허가·승인(법원·대통령)-집행(정보수사기관)-협조(통신업체) 체제로 3원화한 선진국 수준의 감청제도를 마련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박민식	‘15.06.01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 최소화, 국가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요소를 원천차단 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서상기	2015.11.17	통신자료가 개인정보의 일부임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서상기	2015.11.17	‘통신자료제공’ 및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국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법/제도 정비	

3.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보 관련 법안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보 관련 주요 법안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 복무하는 단기 장교, 부사관과 현역병에 대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다. 이는 최근 북한의 군을 대상으로 한 무력 도발로 군인들의 자발적인 전역 연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초기 단계에서 극복하고 전면적인 발발위험이 고조될 경우 전쟁 개시 이전 주요 부대의 전투 준비가 선행될 수 있도록 위기 대처를 위한 부분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안’이다.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그동안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표 3】** 참조).

【표 3】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안보관련 주요법안

연 번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주요내용	비고
1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홍철호	‘15.12.02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과 현역병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전역 연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	병역법 일부 개정과 연계 통과
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안	송영근	‘14.03.20	북한의 도발을 초기단계에 극복, 전면적 발발위협이 고조될 경우 전쟁개시 이전 주요부대의 전투준비가 선행될 수 있도록 위기대처를 위한 부분 동원 가능하도록 함	
3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13.06.0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관해서만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어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 등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법이 부재. 해외파견에 관한 내용과 절차 규정	

4.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보관련 주요법안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보 관련 주요 법안은 정보기관이 테러방지를 위해 테러자금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FIU 법’이다. 대표적으로 박민식 의원안이 논의가 되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표 4】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안보관련 주요법안

연 번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주요내용	비고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박민식	‘15.03.06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에 내란·외환의 죄와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한 수사 및 대테러·방첩관련 정보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	대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안보4법에 해당

연 번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주요내용	비고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김도읍	'15.01.30	중대한 안보위해사범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 확인 사실을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5.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보관련 주요법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보관련 주요 법안은 다양하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범죄에 국가보안법 등 중대 안보위해 범죄를 추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고자 등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필요시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안',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 형법 일부개정안', 법원에 국가안보 위해 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일부개정안' 등이 있다(【표 5】 참조).

【표 5】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보관련 주요법안

연 번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주요내용	비고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이헌승	'12.07.04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홍일표	'14.10.21	감청 자료 삭제 의무 규정과 제3자 통지 규정을 마련 ① 연장 청구 단서 조항 마련 ② 현행법 제9조의2제2항의 근거 조항 문구 오류 수정	
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서상기	'15.11.17	① 감청에 대한 범위를 디지털 시대 맞게 재정의 ② 전기통신사업자 감청협조설비를 통한 내국인 휴대폰 및 SNS 감청을 금지 (외국인에 한해서만 감청 허용)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김도읍	2015.01.3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범죄에 국가보안법 등 중대 안보위해범죄를 추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고자 등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필요시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연 번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주요내용	비고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우택	2014.12.04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을 상대로 하는 계약의 입찰, 채 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집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 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집 행의 죄보다 가중처벌하여 공공 기관 관련 납품비리를 근절	
6	군 형법 일부개정안	송영근	2015.12.09	그동안 법원의 축적된 판례를 참고하여 ‘군사상기밀’의 용 어를 정의하는 한편, ‘군사상기 밀’을 불법 거래하거나, 외국을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김진태	2015.05.18	법원에 국가안보 위해 사범 사 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고 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과 아울러, 전문적 지 식을 바탕으로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8	군 형법 일부개정안	송영근	2015.10.12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이 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임	
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김재경	2015.09.09	정보기관, 검찰, 경찰 등 관련 법 집행기관의 FIU 금융거래정 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차단, 예방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범죄 목록(제2조제1호 관련 별표)에 국가안보 위해행위와 관련된 범 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10	형법 일부개정안	이만우	2014.03.05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국가의 안전 과 이익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 는 것임	